

# 공항 이전·달빛철도·노동제도 개선 광주상의 16개 핵심 대선공약 제시

지역 경제계 목소리 반영 선정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각 정당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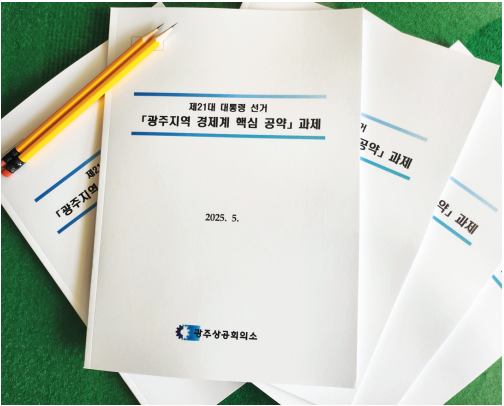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지역 산업현장과 경제계 의견 등을 종합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폭넓게 담고 있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 반영이 기대되고 있다.

7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등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 16개를 발굴하고, 조만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상의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마련했다.

최우선으로 제시한 공약은 광주 민간·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다. 광주상의는 해당 공약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국가 주도 이전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의는 또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



광주상의가 제안한 대선 공약집.

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상의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재생에너지·에너지 특화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원을 지적하고, 민선 8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상의는 추가 핵심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도 담았다.

상의는 이 밖에도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건립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 과학기술, 기후위기, 노동시장, 세제 분야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마련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위원장, 민형배(광주광산율)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약 과제 등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 반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지하수담 국가 연구개발 토론회

새로운 수자원 확보 다양한 노력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최근 지하수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고려대, 동국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추진, 대외기관·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 구성 등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 환경부에서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담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되는 성과도 냈다.

해당 연구는 지하수담 입지 선정,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기술 개발을 핵심 과제로, 4년간 연구비 353억원이 투입된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다양한 수원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하수담’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평·인치·근 단위 사용 자제해주세요”

소비자감시원 감시활동 나서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 활동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지역에서 선발된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감시원이 오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유류용 계량기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평’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되’, ‘근’, ‘돈’, ‘자’ 등 비법정단위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벌인다. 인치, 평, 결런, 돈 등은 비법정단위이며, 각각 m, m<sup>2</sup>, l, g를 사용해야 맞다.

전응길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감시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호텔 망고빙수 가격 고공행진…15만원 육박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올라

올해도 호텔 빙수(사진) 가격이 오르면서 15만원에 육박하는 빙수가 등장했다.

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포시즌스호텔서울은 제주 애플망고빙수를 14만900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가격 12만6000원보다 18.3% 인상된 가격이다. 빙수에는 프리미엄 제주산 애플망고 2개가 들어간다. 포시즌스호텔은 한국 전통 디저트인 팥빙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루 빙수도 8만9000원에 선보인다.

지난해 망고빙수를 13만원에 판매했던 시그니얼서울은 올해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동결했다. 롯데호텔서울은 망고빙수 가격을 지난해 9만2000원에서 11만원으로 가격을 19.6% 인상했다.

서울신라호텔 역시 망고빙수 가격을 지난해 10만2000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7.8% 인상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제주산 애플망고를 사용하는데 매년 가격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며 “다른 식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집계하는 가락시장 가격 현황에 따르면 국산 망고(3kg·특)는 이날 평균 가격 18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7만원)보다 5.9%가량 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2일 금융경제강좌

‘불확실성 시대 자산관리’ 주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202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2회차 강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는 금융·경제 관련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강연으로, 올해 총 6강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겸 박사가 ‘불확실성 시대의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홍 박사는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공단 투자운용팀장 등을 역임하고,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크’, ‘대한민국 돈의 역사’ 등 경제 및 금융투자 관련 저서들을 집필했다.

홍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개인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각 연령층별로 적합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노하우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대출금리 하락속도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가계대출 목표 정해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게 원래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물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

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연간 우리 계획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 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금융연구원,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로 1.2%P 낮춰

“내수부진·수출위축 심화”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2.0%에서 1.2%포인트(p)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하고 누적된 주주 부진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화했다.

건설투자는 작년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전

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을 둔화로 건설 주주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세, 미분양 적체 등을 향후 건설투자 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총수8출과 총수입은 모두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총수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이 중간재·자본재 수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수입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1.9%로 연간 기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했다.

연구원은 지정학적 위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물가에 상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또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다만 “전년 대비 증가 예정인 국고채 발행량과 추정 가능성, 세계국제지수(워비·WGBI) 편입 지연 등 수급 문제는 금리 하락세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80억달러로 예상된다. 전 세계 원유 수요 둔화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입 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수출입 모두 금액 기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573.80 | (+14.01) |
| ▲ 코스닥          | 722.81  | (+0.95)  |
| ↓ 금리(국고채 39년)  | 2.253   | (-0.029) |
| ↓ 환율(USD)      | 1394.30 | (-11.00) |
| 〈오후 4시 49분 기준〉 |         |          |